

대구는 속도내는데...광주 민간·군공항 통합이전 '안갯속'

국방부, 대구 군공항 이전계획 승인
국조실 '범정부협의체' 재개 불투명
광주시 "적극추진하기 어려운 상황"
道 "광주 설득력있는 대안 제시해야"

국방부가 지난 21일 대구 군공항 이전사업 계획을 최종 승인한 가운데 광주 민·군공항 무안 국제공항 통합 이전은 한치 앞도 전망하기 힘든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무안군이 군공항 이전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 광주시와 전남도 사이의 관련 논의도 사실상 중단 상태여서 꼬인 실태를 풀 단초를 마련하기 녹록지 않을 것만 우려가 나온다.

22일 광주시·전남도·국방부·국무조정실에 따르면 광주 군공항 이전 논의를 위한 정부 관계기관과의 회의가 국정 혼란으로 모두 연기돼 개최 여부가 불확실하다.

당초 광주시는 오는 2월 초 국방부 주관 군공항 이전 관계기관 협의회에 참석해 군공항 이전 관련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지난 19일 서울서부지방법원 폭동 사태가 벌어지면서 회의는 잠정 연기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2월 초 광주 군공항 이전 관련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지만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 수습이 우선이라고 판단해 회의를 연기했다"며 "추후 참석 기관 등을 확정하고 다시 일정을 조율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13일 열릴 예정이었던 국무조정실 주관 범정부협의체 실무회의는 12·3 비상계엄 사태의 여파로 무기한 연기됐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아직 회의의 재개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다"며 "올해 상반기 내 재개할 방침이기는 하나, 아직 국방부, 전남도, 광주시 등과 협의하지 않아 실무적으로 의견을 수렴한 뒤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구성된 더불어민주당·전남 상생발전TF 역시 탄핵 정국을 맞으면서 군공항 이전 문제 논의를 중단한 상태다. 재개 시기 도 오리무중이다.

광주 군공항이전 문제는 광주·전남이 수년째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최대 난제다. 광주시, 전남도, 무안군 간 협의의 난항으로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던 상황에서 탄핵 정국까지 겹쳐 논의의 자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2면에 계속 /김재정·변은진 기자



설 대목 붐비는 전통시장 /김애리 기자
민족 최대 명절인 설 연휴를 사흘 앞둔 22일 오전 광주 북구 우산동 말바우시장이 명절 대목을 맞아 제수용품 구매하려는 시민들로 붐비고 있다. ▶관련기사 6면

“서울서부지법 공격 헌법질서 근간 훼손”

전국법관대표회의의 공식 입장 발표
“용인 불가...흔들림없이 공정재판”

일선 법원 판사들의 회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지난 19일 새벽 발생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서울서부지법 집단 습격 사태에 우려를 표했다. ▶관련기사 2·4면
전국법관대표회의는 22일 오후 발표한 입장문에서 “재판을 이유로 법원을 집단적, 폭력적으로 공격하는 것은 사법부의 기능을 침해하고 헌법 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로 결코 용인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전국의 법관들은 어떤 위협에도 흔들

림 없이 공정한 재판을 함으로써 헌법과 법률에 의해 부여받은 책임을 다할 것”이라며 “사법부의 기능과 법관의 독립을 지키기 위해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고 했다.

이 같은 입장은 이날 소집된 임시회의에서 과반의 찬성을 얻어 발표했다. 법관대표 124명 중 81명이 투표해 찬성 48명, 반대 33명으로 의안이 가결됐다.

전국법관대표회의의 관계자는 반대의 의견에 관해 “기존 대법관회의에서 같은 내용이 공표됐고 법관의 의견이 정치적으로 이용될 우려가 있으며 서울서부지법 사태로 인한 재판에 예단을 가진 것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입장 표명 자체에 소극적인 입장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다수를 차지한 찬성 의견은 “법원에 대한 집단적 폭력 사태라는 사안의 심각성에 비추 볼 때 법관 전체의 의사를 밝힐 필요가 있다”며 “서울서부지법 관련 재판 역시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될 것임을 천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모인 회의체로 사법행정 및 법관 독립에 관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한다. 필요한 경우 사법행정 담당자의 설명과 자료 제출도 요구할 수 있다. /연합뉴스

취약 어르신 민생지원금
전남도, 설 전 지급 완료
난방비·부식비 등 105억

전남도가 설을 맞아 겨울철 한파와 에너지물가 상승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저소득 취약계층 어르신에 대한 민생지원금 105억원을 설 이전에 모두 지급한다.

전남도는 취약계층 어르신의 겨울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하고 예비비 105억원을 긴급 편성했다.

겨울철 어르신의 균형잡힌 식사 제공을 위해 전남지역 9천486개소 경로당에 부식비를 10만 원씩 3개월간 총 30만원 지급하고, 65세 이상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어르신 7만여명에게 1인당 10만원의 난방비를 한시 지급한다.

그동안 전남도는 어르신이 주로 이용하는 경로당에 난방비 월 40만원, 양곡비 월 5만2천원을 지급했다. 또한 지속적인 정부 건의로 경로당 운영비 전액을 반납하지 않고 식사 밀반찬이나 재료 구입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 제도를 개선했다.

이 밖에도 노인복지관 등 138개소의 경로식당에서 저소득 어르신에게 무료로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 연간 109억원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다.

황인수 고령군 노인회장은 “전남도가 어려운 경제·정치적 여건에서도 노인을 위한 돌봄 정책을 꾸준히 펼쳐 경제적 부담을 많이 덜고 있다”며 감사의 말을 전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대내외적 여건이 쉽지 않지만 ‘희망과 치유’의 2025년 설을 맞아 어르신이 안전하고 건강한 겨울을 보내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재정 기자

Today

공직자들 '도박'...화순군수 공식 사과 6면
참사·정치 혼란에도 나눔 온도 '떨떨' 7면

노성태 원장의
남도인물열전 14면

곽도규 1억2천, 박찬호·최원준 4억 돌파 16면

당신 곁에

GWANGJU

더 단단한 민주주의 더 따뜻한 민생경제 언제나 함께 하겠습니다.